

CNI 세미나 2025-001

# 지방자치단체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방향과 과제

2025. 2. 25. (화)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 지방자치단체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과 과제

## 1 추진배경

-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구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충남의 경우 인구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고, 천안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실정임
- 향후 충남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영향평가 제도도입에 대한 정책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구영향평가에 대한 종합적 실태진단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도입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2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5.2.25.(화), 14:00 ~ 16:20
- 장 소 : 충남연구원 3층 세미나실
- 주 최 : 충남연구원

## 3 세부일정

14:00~14:05	참석자 소개
14:05~14:10	인사말 오용준 실장(충남연구원)
14:10~15:00 (주제발표)	발 표 1 인구영향평가제도의 의의와 구조 박진경 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 표 2 인구영향평가제도 운영을 통한 부산지역 인구위기 대응 김세현 박사(부산연구원)
15:00~15:10	휴 식
15:10~16:20 (종합토론)	좌 장 이관률 박사(충남연구원) 토 론 우해봉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지은 박사(서울연구원) 정경임 팀장(경기도청) 한미라 팀장(충남도청) 박희정 팀장(천안시청)

# 인구영향평가제도의 의의와 구조

박진경 박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인구영향평가제도의 의의와 구조

2025. 2. 2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진경 연구위원



## CONTENTS

Part 1. 인구영향평가 논의

Part 2. 주요 인구영향평가 관련 제도

Part 3. 지방자치단체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사례

Part 4. 인구영향평가제도 설계





## Part 1. 인구영향평가 논의

1. 인구정책과 정책의 평가
2. 영향평가제도 개념과 유형



## 1. 인구정책과 정책의 평가



### 인구정책

- 인구정책은 국가나 지역이 지향하는 목표에 인구학적 상황이 조응하도록 하는 직간접적인 조치(김종훈·우해봉, 2018)
  - 인구정책이 경제정책이나 여타의 지역정책과 구별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정책목표가 인구학적 조건이나 추세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데 있음
- 인구규모와 구조를 의도적으로 변경하기 위해 인구변동요인에 영향을 가하는 국가·지자체의 제도, 정책, 행동계획 등을 포괄(이삼식, 2013)
  - ✓ Demeny(2010): 정부가 인구학적 변화를 이끌기 위해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조정한 제도환경이나 프로그램
  - ✓ May(2012): 사회의 목표와 인구학적 상황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취하는 직간접적인 정책
    - ▶ 정책목표가 인구학적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다른 정책보다 목표달성이 어렵고, 효과적인 수단을 찾기 어려운 정책임
    - ▶ 개인의 사적인 삶에 개입하는 것이어서 개인의 의사존중시대, 정부의 개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도 어려운 난제

### 인구정책의 평가

- 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 인구영향평가 등 인구정책 평가
  - 인구정책적 개입의 효과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맥락에 달라 있어 인구정책의 효과성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은 쉽지 않음
  - 정책적인 개입이 기대하는 결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적인 간극이 발생하고, 대부분 활용가능한 자료가 단기적 정보에 국한되어 있어 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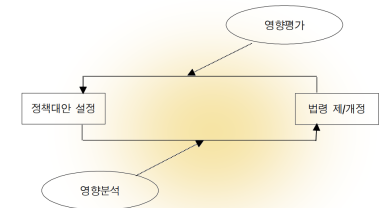


## 2. 영향평가제도 개념과 유형

###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의 개념

- 계획된 정책수단의 부작용, 비용, 결과 등을 평가함에 있어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분석접근(OECD, 2001)
  - 영향평가는 정책의 포용력을 향상시키고, 정책수단과 정책결정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주요한 도구로써, 집행된 후 정책수단의 실제 결과와 비용을 평가할 때도 적용
- 영향평가제도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혹은 직면한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다른 정책 대안들의 예상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정책 순환과정



출처: KDI(2018),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평가체계 개편 연구

### 영향평가의 구분

#### 영향분석 (Impact Analysis)

- ✓ **사전적으로 실시**
- ✓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에 대하여 일정한 가정에 근거하여 비용과 편익을 예상함으로써 정책담당자들이 비용 대비 편익을 근거로 최종적인 안을 확정하는데 기여

#### 영향평가 (Impact Assessment)

- ✓ **사후적으로 수행**
- ✓ 기도입된 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사후평가함으로써 기존 정책의 단점을 개선하는 새로운 정책대안 설정에 기여

## 2. 영향평가제도 개념과 유형

### 영향평가의 유형

	규제형 영향평가	규범형 영향평가
내용	✓ 정량적 지표를 통한 평가의 결과가 사업 실시 및 시행계획 등의 허가, 인가, 승인, 면허 등 행정위에 영향을 미침	✓ 체계적 평가를 통해 정책수립과 시행 등에 합리적인 개선 유도
특징	✓ <b>구속력 있음</b> (사업실시 불가)	✓ 구속력은 없고 <b>권고적 성격</b>
사례	✓ <b>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b> 등	✓ <b>성별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문화영향평가, 기술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개인정보영향평가</b> 등
장점	✓ 효과적 평가 목적 달성 가능(제도적 틀 안에서 사업 제재) ✓ 대규모 개발/시설조성 사업 등에 적용	✓ 사회적으로 제도 수용에 대한 저항 미비(강제성 없음) ✓ 제도의 의의/목적/가치 확대 용이
단점	✓ 평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 과다, 사업시행 등에 따른 <b>규제심화</b> 로 진입장벽(타 부처, 관계자 등 협의의 어려움) ✓ 다른 평가제도와 중복/과다 문제 발생	✓ <b>평가의 실효성 문제</b> 발생(평가결과에 대한 개선방안 실행력 담보 문제)

출처: 김성하(2016),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도입방안, 경기연구원

## 2. 영향평가제도 개념과 유형



### 우리나라 영향평가제도 도입 추이

구분	내용	근거법	시행시기	평가대상
환경영향평가		환경보전법	1981년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도시개발, 산업입지, 에너지개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 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1991년 2001년 2009년	도시개발, 산업입지, 산업단지, 에너지 개발, 항만, 도로의 건설
환경영향평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 등의 허가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평가하여 새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감소시키는 방안 마련	(구)환경정책기본법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평가하여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			
재해영향평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조사평가하여 대책 마련	자연재해대책법	1995년	개발사업
인구영향평가	인구증가에 관한 직간접적인 파급효과, 장단기적으로 인구증가에 미치는 영향, 인구의 사회적 이동에 미치는 영향, 인구집중억제를 위한 대안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1984년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주택지조성사업, 산업기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재개발사업
	인구 및 사회경제 현황, 인구증가 및 이동에 미치는 영향, 인구집중억제를 위한 방안	수도권정비계획법	1994년	
	사업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2001년	2009년 폐지
규제영향분석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미리 분석함으로써 규제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제시	행정규제기본법	1998년	
부패영향평가	부패유발요인에 대하여 검토	부패방지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005년 2008년	제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 예규, 고시, 공고와 조례, 규칙)
고용영향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정책이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	고용정책기본법	2010년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 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2012년	
건강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상의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평가	환경보건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출처: KDI(2018),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평가체계 개편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Part 1. 인구영향평가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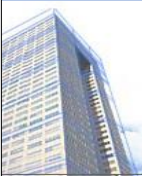
<7/35>

인구영향평가제도의 의의와 구조



## Part 2. 주요 인구영향평가 관련 제도

1. 인구영향평가제도
2. 고용영향평가제도
3. 성별영향평가제도



# 1. 인구영향평가제도

## 우리나라 인구영향평가: 사전영향평가와 사후영향평가 통칭

- 정책 대안의 효과에 대한 분석·평가는 사전적으로 실시되는 영향분석과 사후적으로 수행되는 영향평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영향평가제도로서는 최초 도입된 환경영향평가로 인하여, 사전·사후 모두 영향평가제도로 통칭하는 경향이 있음
- 우리나라에서 인구영향평가가 최초로 도입되었던 시기는 1984년이나 인구정책에 대한 영향평가기기보다는 환경영향평가의 일부분으로 구축·운영된 것이며, 인구집중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임

규제형

- ✓ 평가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실시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형 영향평가
- ✓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규범형

- ✓ 권고적 성격을 갖는 규범형 영향평가
- ✓ 고용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과거 인구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되었던 인구영향평가제도는 규제형

▶ 현재 인구구조와 규모 개선 등 인구의 긍정적 효과를 확산시키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영향평가제도는 규범형

# 1. 인구영향평가제도

## 우리나라 인구영향평가제도

-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차원의 인구영향평가제도는 없고, 2005년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 인구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6~'20)을 통해 인구관련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려고 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함
  -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매년 전년도 시행계획별 사업 및 정책과제들의 결과 평가(보사연, 2017)
  - 2016년부터는 **핵심과제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 추가 시행**

## 추진체계

- 2025년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 인구정책연구실 산하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에서 수행하다가 현재는 부원장 산하 인구정책기획단 소속으로 변경
  - 센터장 1명, 연구위원 2명, 부연구위원 2명, 겸직 3명으로 구성
-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의 주요업무
  - 인구구조와 분포의 변동 추이 및 특성 분석
  - 인구변동요인(출생·사망·이동)의 내·외생적 요인과 상호관계에 관한 이론 실증 연구
  - 인구변동 모니터링 지표 개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인구변동 모니터링 수행
  - 인구·가구 추계 모형 연구 및 인구 기초·가공통계 생산
  - 인구정책 의제 개발, 평가방법 연구 및 정책 평가



## 2. 고용영향평가제도



### 고용영향평가제도(Employment Impact Assessment)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및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2조~23조」에 의거 2010년부터 각 부처의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 시행
- 목적: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정책·사업, 법·제도 등의 수립·추진으로 인해 예상되는 고용효과 분석을 통해 정책의 목적 달성 및 **양적·질적 일자리 제고**
- 평가 대상: 일자리 창출 핵심사업,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주요 재정지출사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제도·규제 개선 정책 등

### 고용영향평가 평가대상과 평가절차



국민경제적 차원, 여러 산업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제도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주요 재정지출사업 : 인프라, R&D, 산업육성, 노동, 복지, 관광 분야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 제도, 규제개선 정책



민간단체(경제단체, 노조, NGO 등) 및 일반국민이 제안하는 과제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https://www.kli.re.kr/eia>), 2025년 2월 검색

평가절차	추진 내용
대상선정	대상과제 선정(국민제안, 전문가 및 부처 협의)
평가실시	고용영향평가센터를 중심으로 평가 실시
부처협의	평가결과 관련 부처 의견 수렴
결과통보	최종결과 관계부처 통보, 차관회의, 고용정책심의회 보고
정책반영	각 부처는 정책제언 반영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을 고용노동부에게 제출
모니터링	정책 반영현황 모니터링(부처 자체점검, 현장 모니터링 실시)

## 2. 고용영향평가제도



### 고용영향평가 평가지표

- 고용영향평가(4가지 핵심내용): ① 기초조사와 전체 열개구성 ② 양적평가 ③ 질적평가 ④ 평가결과의 결합과 정책권고의 도출
- 양적 고용효과
  - 직접효과: 사업, 정책, 법,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효과(재정투입시 인건비 관련항목으로 추정, 재정비투입시 기존자료, 실태, 의향조사로 추정)
  - 간접효과: 사업, 정책, 법, 제도의 도입으로 타 산업 및 경제 전체에서 발생하는 효과(산업연관분석 사용)
- 질적 고용효과

분류	세부 평가 및 권고 항목
고용확대	내국인 고용, 미취업자 우선 고용, 사업계획서 작성 방식(사업일정, 사업비책정방식), 고용 소외계층의 고용(청년, 여성, 고령), 초과근로시간과 직장 나누기
고용의 질 제고	직접고용의 안정성(고용계약 형태와 사업 후의 일시적 실업), 임금수준(유사(민간) 사업에서의 기능별 임금수준 비교), 직접 고용에 대한 교육과 훈련, 근로 안전 예산확보
인력수급	노동시장 교란방지(타 사업장 고용의 교란), 교육훈련을 통한 수급
고용의 지속가능성	사업, 정책, 법 그리고 제도가 실제로 운용된 이후에도 (정부의 지원 없이) 고용이 유지되는 수준
평가대상의 특수성	-

출처: 박진경 김상민(2017), 전남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 고용영향평가제도

### 추진체계

-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산하 **고용영향평가센터**에서 전담하여 수행
  - 센터장 1명, 평가기획팀(팀장1, 전문위원1, 연구원3), 정책평가팀(팀장1, 전문위원 2), 정책연구팀(팀장1, 전문위원1)
- 주요업무
  - 평가기획팀은 고용영향평가사업 기획, 법령 고용영향평가, 대외 협력 등을 수행
  - 정책평가팀은 정책고용영향평가 연구사업 운영, 품질 관리, 연구 결과 모니터링 등을 수행
  - 정책연구팀은 고용영향평가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



Part 2. 주요 인구영향평가 관련 제도

<13/35>

인구영향평가제도의 의의와 구조

## 3. 성별영향평가제도

### 성별영향평가제도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에 근거
- 목적: 정부 주요 정책 수립과정에서 나타나는 여성과 남성의 특성 및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분석·평가를 통해 정부 정책에서 **성 평등 실현**에 기여
- 평가대상: 성별영향평가(법령, 계획, 사업, 정보홍보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특정 영역 대상)

### 성별영향평가 평가지표

분석대상	분석평가항목	점검 point
법령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제·개정 법령의 적용 대상에 성별구분 조항이 있습니까? -특정 성별을 명시하는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 -법령에 사용된 용어 중 성별고정관념에 의한 표현이 있습니까? -법령상의 특정 조치가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것이 있습니까?
	성별특성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 성별 특성과 관련한 규정이 있습니까?
	성별균형참여	-위원회 등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까? -위원회 등의 위원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성별통계	-법령과 관련한 별지 서식, 실태조사 등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
계획	비전과 목표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 목표에 부합하는지와 성별로 다른 영향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
	전략 및 중점과제	-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이로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는 지 점검
		-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 성별에 따른 경제적 차이로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는 지 점검
		-남녀의 신체적 차이로 인해 사업에 대해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는 지 점검
	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사업 수혜자 성비가 사업 대상자와 비교해 형평성이 있는지 점검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사업수혜발생에 있어서 성별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점검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과제 산출·수정 등 개선방안 제시

Part 2. 주요 인구영향평가 관련 제도

<14/35>

인구영향평가제도의 의의와 구조



### 3. 성별영향평가제도



#### 성별영향평가 평가지표

분석대상	분석평가항목	점검 point
사업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 (생물학적) 차이
		-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이로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는 지 점검
		-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 성별에 따른 경제적 차이로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는 지 점검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여부	-사업 수혜자 성비가 사업 대상자와 비교해 형평성이 있는지 점검
		-사업수혜발생에 있어서 성별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점검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정책개선 및 환류)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여부	-예산배분에 있어서 성별 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점검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에 대한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법령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성인지 예산 반영 계획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에 대한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에 대한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내용·수행방식(기타 제도 개선 포함)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에 반영 등
	성역할 고정 관념 및 편견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있는가? -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고 있는가?
정부홍보 사업	성차별적 표현/비하/외모지상주의	-성차별적 언어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 -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열등하게 묘사하고 있는가? -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희화화 혹은 신체를 부각해 성적 대상화하는 표현이 있는가?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특성을 특정 성별로 구분하여 표현하는가? - 부부, 연인, 친구 등 가까운 사이의 폭력을 개인 간의 문제 혹은 사소한 문제라고 가정하고 있는가? - 범죄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가?
	가족에 대한 고정 관념/편견	-가족 이미지를 특정유형으로만 한정하고 있는가? - 가족 내 역할을 성별에 따라 고정하고 있는가?
	성별 대표성 불균형	-특정 성별·연령에 치우쳐 있거나 배제하고 있는가?

출처 : 여성가족부(2022), 성별영향평가 지침

Part 2. 주요 인구영향평가 관련 제도

(15/35)

인구영향평가제도의 의의와 구조

### 3. 성별영향평가제도



#### 추진체계

- 성별영향평가 : **여성가족부**에서 운영
-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주체는 여성가족부장관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수행(**전문연구기관 등에 심층평가를 위탁 가능**)

평가대상	각 기관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중앙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별영향평가 실시</li> <li>체크리스트와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제출</li> <li>평가서 검토를 위한 자료 제출(요청 시)</li> <li>반영계획제출(개선의견을 받은 경우)</li> </ul>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담당부서)</li> <li>성별영향평가 실시</li> <li>체크리스트와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제출</li> <li>반영계획 제출(개선의견을 받은 경우)</li> <li>(성별영향평가책임관)</li> <li>성별영향평가서 검토 및 정책개선 실적 관리</li> </ul>
특정 성별영향평가	중앙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정책에 대한 자료 제출</li> <li>개선대책 수립·시행 및 반영계획 통보</li> </ul>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별영향평가책임관)</li> <li>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정책개선 추진 및 반영결과 점검</li> <li>(사업담당부서)</li> <li>대상 정책에 대한 자료 제출</li> <li>개선대책 수립·시행 및 반영계획 통보</li> </ul>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관별 종합결과보고 제출(다음년도 2월말)</li> <li>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국무회의)</li> <li>국회 제출 및 공표</li> </ul>

Part 2. 주요 인구영향평가 관련 제도

(16/35)

인구영향평가제도의 의의와 구조



## Part 3. 지방자치단체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사례

1. 지방자치단체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2. 광역자치단체 인구영향평가제도
3. 기초자치단체 인구영향평가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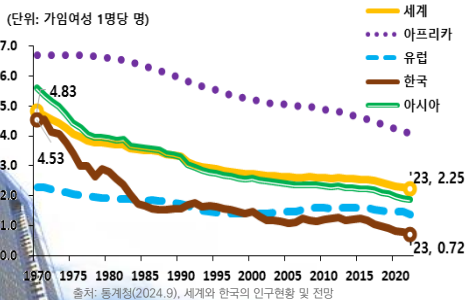
## 1. 지방자치단체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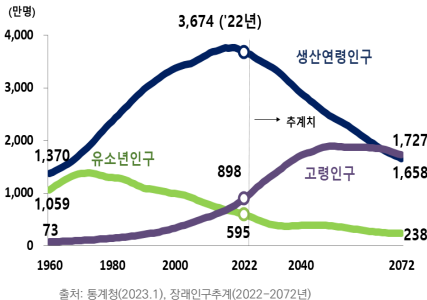
### 세계 유례 없는 초저출산, 늘어가는 국가

- '20년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를 초과하는 **데드크로스** 발생(자연감소규모 '22년 -11만명, '72년 -53만명 수준 전망, 통계청)
- **합계출산율 세계 최하위** : 202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 세계 합계출산율(2.25명)보다 1.53명 낮음(서울, 0.55명으로 반토막)
- '17년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 시작 : **노동공급 감소**, 노동시장 인력부족 전망, 국가경쟁력 악화 가능성 내재
- '17년 인구구조 역전: **총부양비** '22년 41명에서 '72년 119명으로 **2.9배 증가**(유소년인구 1백명당 '22년 151.0명, '72년 726.8명, 4.8배 증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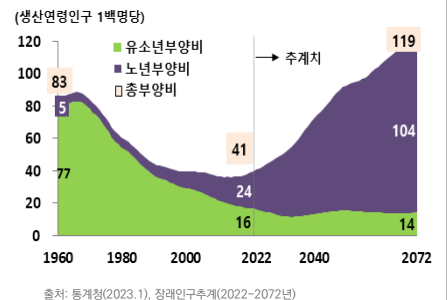
세계와 한국의 합계출산율 추이



연령별 인구구조(1960-2072)



생산연령인구 100백명당 부양비(1960-20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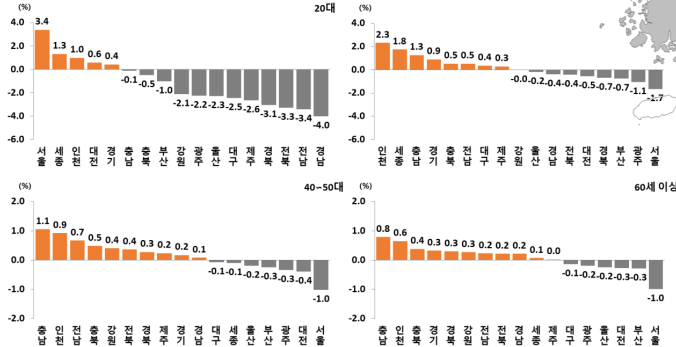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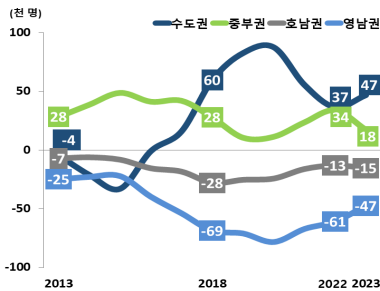




# 1. 지방자치단체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 청년은 수도권으로, 중장년은 지방으로

- 중부권은 순유입, 영남권과 호남권은 순유출
- 서울은 20대만 순유입, 인천과 경기는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순유입
- 수도권은 30대 이하 순유입, 40대 이상 순유출
- 중부권은 20대 이하 순유출, 다른 연령층 순유입
- 호남권은 30대 이하 순유출, 40대 이하 순유입
- 영남권은 40대 이하 순유출, 50대 이상 순유입



# 1. 지방자치단체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인구영향평가제도를 먼저 도입하기 시작

- 한국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인구정책을 시행 중에 있으나, 관련 정책을 추진한 지 15년이 흘러가고 있음에도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심화
-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인구영향평가 등 정책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움직임이 자치단체 차원에서 먼저 실행되기 시작
  - 국내에서 규범형 인구영향평가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사례는 2017년 부천시이며, 광역자치단체로는 경기도가 2018년 최초로 시행
  - 2025년 현재, 관련 조례상에 인구영향평가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경기, 서울, 부산, 경남 등임
- 인구영향평가 제도의 평가대상은 인구정책 관련 조례상 규정하고 있는 인구정책이며, 매년 평가대상을 선정하여 전문 평가단에 의해 심층평가의 방식으로 인구영향평가 제도 운용 중
  - 최초 도입된 경기도의 사례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틀에서 시사점을 얻어, 성, 연령, 가족, 여성, 인구증감 등의 지표로 구성

## 2. 광역자치단체 인구영향평가제도



### 경기도, 서울시, 부산시가 별도 인구영향평가 조례 보유

-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경기도가 가장 먼저 2018년 인구영향평가제도를 도입
- 경기도, 서울시, 부산시가 별도 조례를 제정하였고, 경남은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서 규정

#### 경기도

- ✓ 2017. 6. 13 제정(**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15조 인구영향평가**)
- ✓ 별도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조례** 2021.5.20 **최초 시행**

#### 경상남도

- ✓ 2021. 5. 3 제정(**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6조의 2 인구영향평가**)

#### 서울특별시

- ✓ 2021. 12. 30 제정(**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7조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인구영향평가 심의**)
- ✓ 별도 **서울특별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2023.1.1 시행

#### 부산광역시

- ✓ 2021. 7. 14 제정(**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8조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인구영향평가 심의**)
- ✓ 별도 **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2022.1.15 시행

인구정책 시행에 따른 인구증감 및 구조 변화에 미치는 직·간접적 효과, 인구정책 시행이 사회·경제적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검토하여 인구변화 예측 및 대응 방안 마련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정책의 시행이 인구증감 및 구조 변화에 미치는 직접적·간접적 파급효과, 장기·단기 영향 및 사회적 이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미래 인구변화에 대응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2025년 2월 검색

## 2. 광역자치단체 인구영향평가제도



### 경기도 인구영향평가제도(경기도 인구영향평가조례)

#### 목적(제1조)

- ✓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인구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 정의(제2조)

- ✓ “인구영향평가”란 정책, 계획, 사업 등의 수립과 시행으로 인해 지역의 인구 구조와 경기도민의 일상적 삶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그 영향을 예측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함
- ✓ 인구정책사업이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시행계획,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상의 사업을 말함

#### 주체(제6조)

- ✓ 도지사는 인구정책 소관부서를 지정
- ✓ 소관부서의 업무: 인구영향평가센터 운영지원, 인구영향평가 대상 공모, 모니터링, 관리감독 등

#### 대상(제7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지원정책, **결혼·임산·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의 **고령친화산업** 지원정책,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인구정책사업**, 그 밖의 **저출생·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정책**

#### 센터설치(제10조)

- ✓ 경기도 인구영향평가센터 설치(대상선정 및 공모, 평가실시, 인식교육 프로그램 운영, 외부기관 협업, 수행결과보고, 실적 보고 등

#### 정책개선권고 (제13조)

- ✓ 사업담당부서 장에게 **정책개선 권고**

저출생·고령사회 시행계획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2025년 2월 검색

## 2. 광역자치단체 인구영향평가제도



###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방법

- 조례(제2조)상 인구정책 핵심사업에 대한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인구정책의 실태 및 정책효과를 파악하는 것
  - 평가대상은 저출생, 주거·일자리, 고령화 3개 영역이며, 평가방법은 사업부서의 자체진단 결과를 토대로 문항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 부서의 추가 의견 및 향후 계획을 작성(2022년 기준)
- 매년 사업 분야별 결과지표를 설정 후 관리하여 인구정책의 효과성 파악
  - 사업실적 위주의 지표가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지표 설정 및 전문가의 자문과 사업부서의 업무 협의를 통한 실적 관리
  - 사업부서에서 인구영향평가 자체 진단서 및 사업설명서 작성, 전문가 및 분과위원회를 통한 사업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사업 개선방안 마련, 인구 정책위원회 통한 인구정책 효과성 검토

2021년		2022년	
전문가 평가 방식	각 분야별 1인 시행	전문가 평가 방식	평가의 공정성을 반영하여 경기도 이외의 기관 전문가 섭외 및 복수의 전문가에 대한 평가 실시
성과지표	사업부서 실적 위주의 정량평가로 운영	성과지표	성과지표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한 개선방안 논의 후 사업부서와 업무협의 예정
중장기평가 체계구축	없음	중장기평가 체계구축	분야별 결과지표 설정 후 매년 측정 → 변동 결과 값 설정 후 분야별 사업 효과성 파악

###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운영방식(2022년)

구분	쟁점	과제지정
전문가+인구정책조정위원회(보육·교육분과)	✓ 사업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예산 효율성, 개선 효과, 검토 사항, 정책 권고안 등을 도출	저출생
전문가+인구정책조정위원회(주거·일자리분과)	✓ 결과지표 설정을 통한 중장기적 인구	주거·일자리
전문가+인구정책조정위원회(고령화과)	정책의 효과성 파악 및 향후 인구정책 제안	고령화

출처: 경기도(2022), 2022년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추진계획

## 2. 광역자치단체 인구영향평가제도



###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추진체계

- 경기도 인구영향평가는 경기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인구정책담당관에서 추진

출처: 경기도청 홈페이지(2025년 2월 검색)



구분	담당업무
인구정책담당관	-인구정책담당관 업무 총괄
인구정책팀장	-인구정책팀 업무총괄
주무관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등
주무관	-보훈단체 운영지원
주무관	-인구영향평가
주무관2	-서무, 예산
인구기획팀장	-인구기획팀 총괄업무
주무관	-인구문제 인식개선 관련사업 추진
주무관	-인구교육 추진
주무관	-인구교육 등
인구사업팀장	-인구통계팀 총괄업무
주무관	-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주무관	-지역내총생산(GRDP) 추계
주무관	-사회조사, 사업체조사

## 2. 광역자치단체 인구영향평가제도

출처: 경기도청 홈페이지(2025년 2월 검색)



###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자체진단서 및 전문가 평가의견 작성

자체 진단서			
인구영향 평가	성	1) 사업이 성별 인구구조에 영향을 주는가 (해당사항에 )	
	연령	2) 사업이 연령별 인구구조에 영향을 주는가? (해당사항에 )	
	가족	3) 사업이 특정 가족-가구 형태에 영향을 주는가? (해당사항에 )	
	여성	4) 사업이 해당 여성에게 영향을 주는가? (해당사항에 )	
	일가정 양립	5) 사업이 일-가정 양립에 영향을 주는가? (해당사항에 )	
	인구 증감	6) 사업이 인구증감을 이끌 수 있는가? (해당사항에 )	
사업 평가	총 평		
	인구영향에 긍정적인 측면	있음 없음	·(사유를 간략하게 작성)
	인구영향에 부정적인 측면	있음 없음	·(사유를 간략하게 작성)
실행전략	애로사항, 문제점, 한계 개선방안		
	(전문가 검토 의견에 대한 부서와의견 작성)		
개선과제에 대한 부서의견	조치의견	자체개선계획 있음	
		증상기 반영	
		불수용	
		추가 의견 요청	
검토 의견			

사업명	000사업	
1. 정책의 인구 특성 분석		
1. 사업이 성별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		
2. 사업이 연령별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		
3. 사업이 특정 가족-가구에 미치는 영향		
4. 사업이 해당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5. 사업이 일가정 양립에 미치는 영향		
6. 사업이 인구증감에 미치는 영향		
<input type="checkbox"/> 총평		
사업평가 및 실행전략의 적실성 검토	인구정책에 미치는 영향 정도	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낮음
	인구정책에 미치는 수준	직접영향 간접영향
사업 총평		
정책 권고사항		
작성자		

출처: 이소영박진경(2022), 대구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3. 기초자치단체 인구영향평가제도



### 부천시가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인구영향평가제도 시행

- 기초자치단체 중 부천시가 2017년 최초로 인구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였고, 광양시에서 2017년 인구영향검토시스템 구축
-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별도 조례는 없고, 대부분 인구정책 지원조례에서 명시

부천시

- ✓ 부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에서 **인구영향평가 명시**
- ✓ 2017년 당시에는 **아기환경기본조례**

저출산·고령사회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발전가능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광양시

- ✓ 광양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에서 **인구영향검토제 명시**

정책 수립 및 시행, 조례 제·개정 등의 단계에서 인구증가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구영향검토제를 실시할 있음

포항시, 구미시, 여수시,  
원주시, 양평군, 서천군,  
고흥군 등

- ✓ **인구정책 지원조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조례,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등에서 상 **인구영향평가 명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정책 조정으로 대응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2025년 2월 검색

### 3. 기초자치단체 인구영향평가제도

#### 2017년 부천시의 인구영향평가

- 2017년 1월, 부천시 인구영향평가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저출산 등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성과 보육 중심에서 근본대책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 시행
- 인구영향평가제는 아기환영 부천을 위해 고용, 주거, 교육, 문화, 일·가정 양립, 인식 개선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에 해당
- 부천시의 인구영향평가는 **부서와의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가**로써 정량적인 평가지표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았음
- 당시 인구영향평가의 주체는 인구정책추진담당

구분	조례명 (요청사항)	추진실적	
		견고 내용 및 조치계획	수용 여부
1 행정지원과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 생후 1년 미만 자녀 육아시간(1일 1시간) (수용) - 만 12세 이하 자녀 돌봄 휴가(연 2일) (수용) - 자녀 사망 장조사후(1일 → 5일) (불수용)	일부 수용
2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서비스, 운영요청	- 서양(세안) 수용 및 배부 완료	수용
3 참여소통과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강연대상 신설	수용
4 여성청소년과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조례	- 경로우대 적용 및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강연대상 신설	수용
5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복사골 문화센터 체육시설 경로우대 적용 및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강연 대상 신설 → 2017년 8월 시설관리공단 협의 추진(수용)	불수용
6 문화예술과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 실시실제 완료 시까지 아기환영 편의시설 반영조치 ※ 키즈카페는 체험교육실 설치로 대체 예정	수용
7	부천동행박물관 등 문화시설건립 시 아기환영 편의시설 필수 설치	-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강연대상 신설	수용
8 하수과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 경로우대 적용 및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강연대상 신설	수용
9 도시농업과	부천시 여말농업공원 관리운영 조례	- 경로우대 적용 및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강연대상 신설	수용
10 교통시설과	부천시 주차장 조례	-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강연대상 신설 및 강연자격 확인방법 확대	수용
11 한국문화영상진흥원	한국문화영상진흥원 입장권 다자녀 우대	- 2자녀 이상 입장권 강연대상 신설 → 동반가족 포함 40% 강연	수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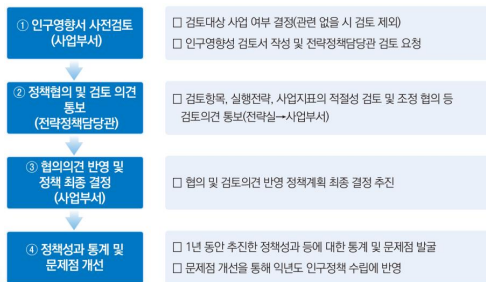
출처: 박진경 김상민(2017), 전남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구분	조례명 (요청사항)	추진실적	
		견고 내용 및 조치계획	수용 여부
12 부천시산업진흥재단	부천로보파크 입장권 다자녀 우대	- 2자녀 이상 입장권 강연대상 신설 → 동반가족 포함 40% 강연	수용
13 건강증진과	신후유물증 예방 서비스 접근성 보완	- 100세 건강실에서 신환 후 유물증 자가검진 고위험군 확인 시 전문기관 연계	수용
14 대중교통과	가족친화적 대중버스 운영	- 미취학아동 동반 부모 배석에 무료 (불수용) - 대중교통의사를 위한 문전가사 안전 교육(수용)	일부 수용
15 청소년지원과	청년의 주거와 일사의 연동 안전지킴이를 위해 부천시 장기근속 기금에 추가	- 입주시무선공공기관(수용) 및 1차 협의	수용
16	아기환영 및 청년 주체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기금지원 추가		수용
17 문화예술과	부천동행박물관 등 문화시설 건립 시 아기환영 편의시설 필수 설치	- 실시실제 완료 시까지 '아기환영 편의시설, 반영 조치	수용
18 복지정책과	동북지역에 업무배치 등 아기환영정책 지속 관리	- '다자녀가정 백악기 지원' 사례전파 (업무배치 일 수록) 예정	수용
19 보육이동과	어린이집 방학기간 운영협조 - 여름/겨울방학 돌봄기간 일지 운영	- 어린이집은 연중 계속 운영 원칙으로 별도 방학기간 운영 불가(매당 일지)	불수용
20 부천시문화영상진흥원	직은 결혼식장 운영 등 요청 직은 결혼식장 대관료 지원	- 직은 결혼식장 대관료 지원 위해 리모텔링 및 클러 지원 요청	수용

### 3. 기초자치단체 인구영향평가제도

#### 2017년 광양시의 인구영향검토제

- 인구영향검토란 정책수립단계에서 특정사업이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영향을 미친다면 가능한 인구증가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목표와 전략, 지표를 모색하고자 2017년 시행
- 대상사업: 인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사업으로써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 모두 포함 하며, 광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에 대한 인구영향 검토(시설구축, 프로그램 지원, 행정서비스 제공사업 등을 포함)
- 시정 향상을 위한 내부 시책사업이나 정부 복지사업과 연계한 복지사업, 도로 및 생활 편의시설 개·보수사업 등은 제외
- 당시 인구영향평가의 주체는 전략정책담당관



출처: 박진경 김상민(2017), 전남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광양시 인구영향검토 항목(사전검토) ]			
사전 검토 (사업부서)			
사업명	있음[ ]	없음[ ]	(선택시 총결)
1. 해당 사업이 인구증가와 관련성이 있습니까?	있음[ ]	없음[ ]	(선택시 총결)
2. '1'에서 관련성이 있다면, 어떤 인구구조 (계층)에 영향을 미칠까요? (○ 체크)	영유아[ ] 청년[ ] 전체[ ]	어린이[ ] 중장년[ ] 전체[ ]	청소년[ ] 노년[ ]
3. 어느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입니까? (○ 체크)	결혼·출생[ ] 일자리[ ]	육아·보육[ ] 주거·주택[ ]	교육환경[ ] 문화·관광[ ]
4. 사업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 체크, 복수 체크 가능)	시설구축[ ] 행정서비스 지원[ ]	프로그램 지원[ ] 기타[ ]	
5. '3'의 인구 증가를 제고하기 위한 실행전략은 무엇입니까?	시설구축[ ] 행정서비스 지원[ ]	프로그램 지원[ ] 기타[ ]	
6. 해당 사업을 인구 증가 성과로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는 무엇입니까?			





## Part 4. 인구영향평가제도 설계

1. 제도 도입의 기본방향
2. 제도 도입 전략
3. 단계별 인구영향평가제도 설계



### 1. 제도 도입의 기본방향



#### 인구정책 목적에 따른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 오늘날 인구영향평가제도는 인구구조 및 규모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한 규범적인 영향평가제도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 기본조례의 인구정책 목적에 따른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필요
- 인구영향평가제도는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되지 않도록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인구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정책의 영향 정도를 분석하여 시민에게 고지할 목적으로 제도를 도입

#### 정책 순환과정상 사전 및 사후 영향평가제도 동시 고려

- 여러 정책 대안들에 대한 사전적 영향평가의 수행으로 실효성 높은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전적 영향평가제도 도입
- 인구정책 중점과제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환류시키는 사후적 영향평가제도 동시 도입 가능

#### 현실적으로 제도 도입의 실효성 고려

- 과도한 평가제도의 도입은 현실적으로 많은 행정비용과 부서간 마찰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자체의 정책여건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도입가능한 제도 방안 제안
- 한국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의 인구영향평가는 수행되고 있지 않으며, 고용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유사 영향평가제도를 검토한 결과, 주요 재정지출 사업을 선정하여 중점 평가하고 결과를 환류받는 체계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평가대상 범위 등을 평가주체의 역량,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고려하여 설계



## 2. 제도 도입전략

### 단계별 도입방안 마련

- 단기적으로는 현재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중점추진과제 성과평가를 인구영향평가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도입방안 강구
  - 직접적인 인구정책을 대상으로 인구영향평가 시범사업 우선 도입
  - 성과평가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일원화, 인구정책팀은 인구영향평가제도 활용
- 중장기적으로 조례/계획/사업 대상 인구영향평가 기본모형 도입
  - 조례 제개정을 통해 인구영향평가에 대한 근거 조항 마련, 조례 기반의 인구정책 기본계획의 사업 대상으로 인구영향평가 실시
  - 사전적 인구영향평가 제도 도입, 인구영향평가의 컨설팅 성격 강화, 인구시책 대상 인구영향평가 수행체계 확립
  -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인구영향평가 전담 조직 확대 또는 인구영향평가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인구영향평가센터 설립

### 인구영향평가 시범사업 먼저 추진

- 인구영향평가 제도를 실효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인구정책이 실제 인구구조 및 규모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판별할 수 있도록 인구영향평가 시범 적용 필요
  - 평가 전담인력 부재, 심층평가를 담당할 전문가들의 한계, 환류체계 미흡이라는 고질적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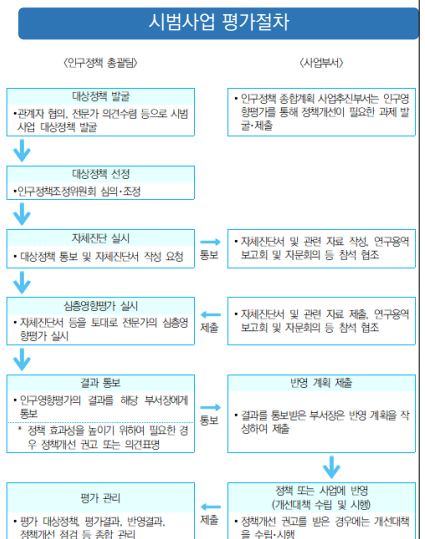
## 3. 단계별 인구영향평가제도 설계

### 단기적 인구영향평가제도(시범사업) 설계

- 단기적으로 관련 제도적 기반(인구정책 기본조례 등) 하에서 정책발굴 및 제도 마련
  - 현재 지자체의 인구정책목표 달성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관정책을 선정하고, 정책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신규사업 중에서 선정
- 인구정책 외 인구영향평가제도를 수행할 지방자치단체 조직 및 인력, 업무 과중도 등을 따져봐야 함

구분	상세내용	비고
평가주관	인구정책팀	인구정책조정위원회 심의
평가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점 인구영향평가 대상의 확정</li> <li>담당 사업부서의 체크리스트 작성</li> <li>관련 전문가의 심층평가 실시</li> <li>심층평가결과서의 개선 및 권고사항 사업부서 송부</li> </ul>	핵심시책에 대한 심층평가 실시
평가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상 단년도 사업기간 완료시점에 맞추어 평가 실시</li> <li>현재 평가시기와 동일하거나 차년도 1~2월 중 실시 가능</li> </ul>	
평가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인구 유지라는 현재의 대규모 인구목표 달성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관 정책을 선정</li> <li>민선자치단체장의 변화 등 정책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신규사업 중에서 선정 가능</li> </ul>	
평가환류	평가결과와 개선사항을 해당 사업부서가 해당년 보완하여 차년도에 사업내용에 반영	

출처: 이소영 박진경(2022), 대구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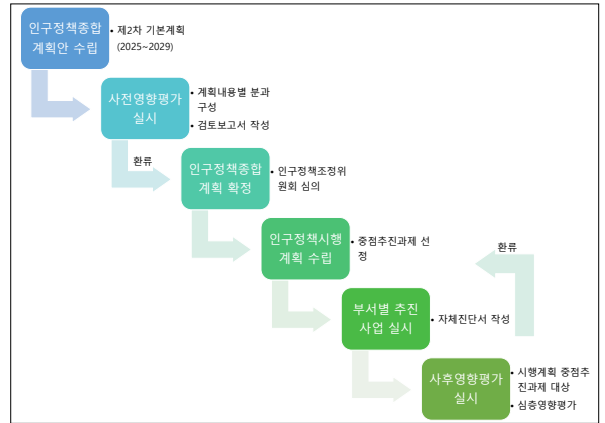


### 3. 단계별 인구영향평가제도 설계

#### ■ 중장기적 인구영향평가제도 설계

- 중장기적으로 관련 제도적 기반(인구정책 기본조례 등 관련 조례) 마련: 인구정책 기본조례상 인구영향평가 제도 신설
- 인구정책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 확대 개편, 광역자치단체라면 인구영향평가센터 설립 검토

구분	상세내용	비고
평가주관	인구정책팀 또는 인구영향평가센터	인구정책조정위원회 심의
평가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계획 수립전 사전 인구영향평가 실시</li> <li>■ 계획안 대상 시민, 관련 전문가, 공무원, 유관기관 등의 체 크리스트 항목 검토 및 집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li> <li>■ 관련 분과 구성을 통한 종합보고서 작성 및 정책 수립</li> <li>■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매년도 사후 영향평가제도 실시</li> </ul>	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제도 실시
평가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영향평가는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이전년도에 실시</li> <li>■ 사후영향평가는 예산상 단년도 사업기간 완료시점에 맞추어 평가 실시</li> </ul>	
평가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영향평가는 5개년 종합계획안을 대상으로 실시</li> <li>■ 사후영향평가는 시행계획상 중점정책과제를 대상으로 실시</li> </ul>	사전영향평가는 종합계획 대상 사후영향평가는 시행계획 대상
평가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영향평가 결과는 종합계획 수립에 반영</li> <li>■ 사후영향평가 결과는 매년도 시행계획상 사업내용에 반영</li> </ul>	



출처: 이소영박진경(2022), 대구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3. 단계별 인구영향평가제도 설계

#### ■ 중장기적 인구영향평가제도의 사전영향평가 관련 체크리스트 예시

출처: 이소영박진경(2022), 대구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구분	체크리스트
인구유입	· 해당 계획이 미래의 인구 유입과 유출에 영향을 미칩니까?
	· 해당 계획이 청년의 인구 유입과 유출에 영향을 미칩니까?
	· 해당 계획이 인구의 향후 인구구조에 영향을 미칩니까?(연령대에 따른 비율)
	· 해당 계획이 인구의 지역분포에 영향을 미칩니까? (도시지역 증가, 농촌지역 감소)
	· 해당 계획으로 인하여 인구 및 연령 구조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저출산 대책	· 해당 계획이 숙련된 근로자의 유입에 영향을 미칩니까? (교육기관, 이주민 교육, 자녀가 있는 여성, 노동 참여 환경 등)
	· 해당 계획이 출생율 증가에 영향을 미칩니까?
	· 해당 계획이 대가에서의 가족공동체, 가족친화 인프라, 보육, 여가 활동, 육아 편의시설 등에 영향을 미칩니까?
고령화 대책	· 해당 계획이 유연적 근무, 재택근무, 일과 가정의 양립 등에 영향을 미칩니까?
	· 해당 계획이 건강증진에 영향을 미칩니까?
	· 해당 계획이 노약자의 도움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영향을 미칩니까?
	· 해당 계획이 노인들의 이동에 익숙한 환경을 제공합니까?
정주여건 개선	· 해당 계획이 간호 및 잠재적 치유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영향을 미칩니까?
	· 해당 계획이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미칩니까?
	· 해당 계획이 교육이나 훈련 차원에서 시 전체의 발전에 영향을 미칩니까?
	· 해당 계획이 교통 및 주거복지 향상에 영향을 미칩니까?
공통 항목	· 해당 계획이 문화여가 환경개선에 영향을 미칩니까?
	· 해당 계획으로 인하여 미래세대의 재정적 부담을 발생시킵니까? (세금, 사회보장 등)
	· 해당 계획이 각 연령에 적합한 정책으로 고안되었습니까?
	· 해당 계획이 일반인들의 복지향상에 영향을 미칩니까? (낮은 진입장벽 등)
	· 해당 계획이 농촌지역 등에서도 동등한 생활조건이 보장됩니까?





감사합니다



# 인구영향평가제도 운영을 통한 부산지역 인구위기 대응

김세현 박사  
(부산연구원)

# 인구영향평가제도 운영을 통한 부산지역 인구위기 대응



2025.02.25.(화)  
충남연구원 3층 세미나실

김세현 (부산연구원 인구전략연구센터장)

**BDi** 부산연구원  
BUSAN DEVELOPMENT INSTITUTE

## 목차

인구영향평가제도 운영을 통한 부산지역 인구위기 대응

### I 부산지역 인구위기 현황

### II 인구영향평가제도

### III 지역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광역 지자체 연구원의 역할

# I | 부산지역 인구위기 현황

## 1. 언론에 비친 지역 인구위기

인구영향평가제도 운영을 통한 부산지역 인구위기 대응

### 부산이 사라진다고?...광역시 중 첫 '소멸위험지역'

'초고령화'와 저출생으로 인해 부산이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했다. 28일 이상추진본부의 연구에 따르면 부산의 소멸위험지수는 0.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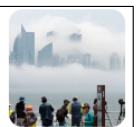
KBS · 5일 전 · 네이버뉴스

### '인구소멸' 부산, 양질의 일자리가 해법

[앵커] 광역시 중에서 가장 먼저 '인구소멸도시'가 된 부산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역시, 일자리입니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 제와도 직결되는데요.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 [지방소멸, 광역시도 위험하다①] 부산 '노인과 바다'...대기업 많...

부산에는 이제 '노인과 바다'뿐이란 얘기마저 나온다. 고향인 부산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취업 후 줄곧 거주 중인 양 아무개 씨(40)는 "일 년에 한두 번 고향을 방문해 지하철을 타면 고령화를 피부로 느낀..."



KBS뉴스 · 네이버TV · 2023.09.18.

### 청년 30% "부산 떠나고 싶다"...이유는 "일자리 부족"

부산지역 청년 3천 명에게 물었더니, 응답한 청년의 30%가 부산을 떠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핵심 이유는 '일자리' 때문이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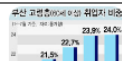
### 부산 2분기 합계출산율도 0.66명...중구 0.32명 전국 최저

혼인 외 출생아 비중은 4.7%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한편 올해 2분기에 부산 출산율은 0.66명으로, 지난해 전체 출산율과 같았다. 올해 1~6월 상반기에 부산에서 태어난 아이는 6424명으로, 지난해 동기(6808명)보...



### 나이 들어서도 일하는 시대... 부산 취업 4명 중 1명 고령자

도시 자체가 고령화됐기 때문이다. 부산 전체 취업자는 168만 7000명인데 고령 취업자는 40만 4000명에 달했다. 이에 2020년 19.9%이던 비중이 올해는 24.0%로 경종 뛰었다. 고령층 창업도 마찬가지다. 올해 1~5월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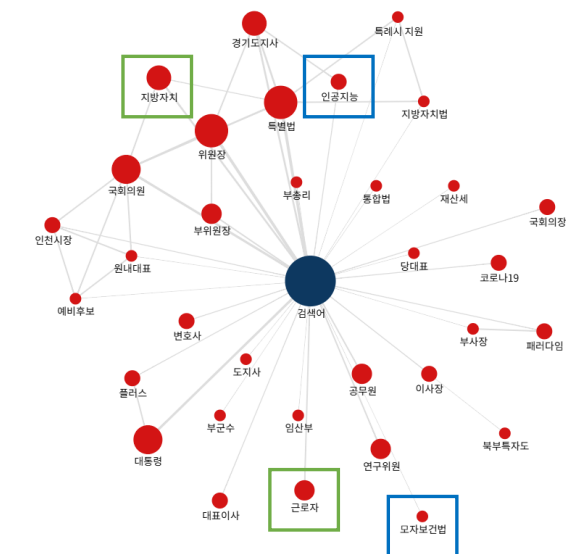
### "부산 소멸단계 충격...부산시 인구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이들은 "부산은 1995년 388만 명이던 인구가 지난해 329만 명까지 줄어들었고 각종 지표도 심각한 상황이지만 부산시는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 또한 인구 유입 정책 재검토, 외국인 노동자 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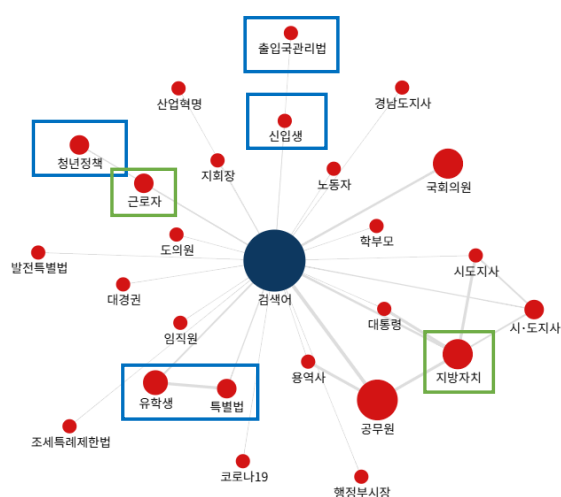
## 1. 언론에 비친 지역 인구위기

### 서울경기 지역신문(키워드: 인구)



자료: 빅카인즈 (2024.1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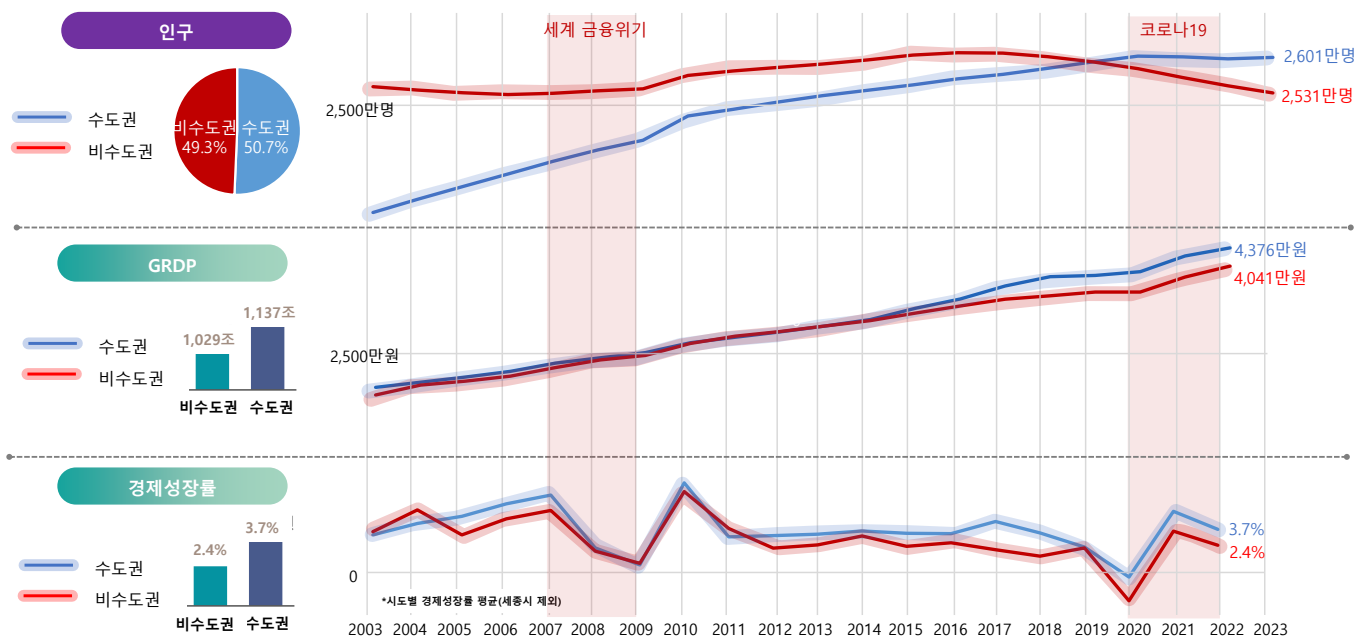
## 부울경 지역신문(키워드: 인구)



- 5 -

## 2. 지역간 인구 불균형

인구영향평가제도 운영을 통한 부산지역 인구위기 대응



- 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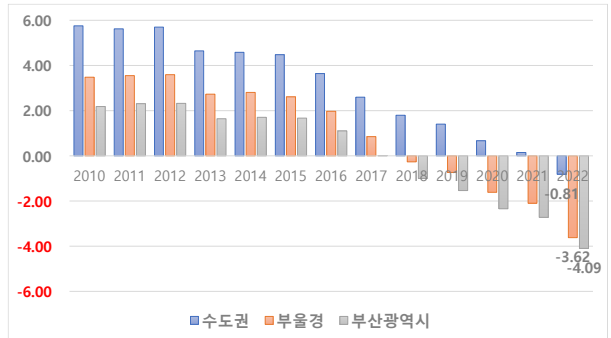
## 2. 지역간 인구 불균형

인구영향평가제도 운영을 통한 부산지역 인구위기 대응

### 수도권과 부울경지역 인구증가율



### 지역별 인구 자연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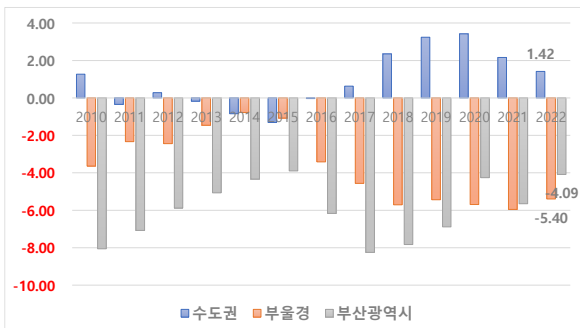
- 2015년 이후 부울경 지역 인구는 감소 중에 있으나, 수도권의 경우 인구 증가 현상이 지속
  - 부산의 경우 1995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인 인구감소를 경험하였으며, 울산(2016년)과 경남(2018년) 역시 감소 추세로 전환
  - 2020년 이후 전국 인구가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으나, 인천과 경기도의 경우에는 오히려 인구증가 현상이 나타남
- 부울경 지역은 2018년부터 인구의 자연감소를 경험

- 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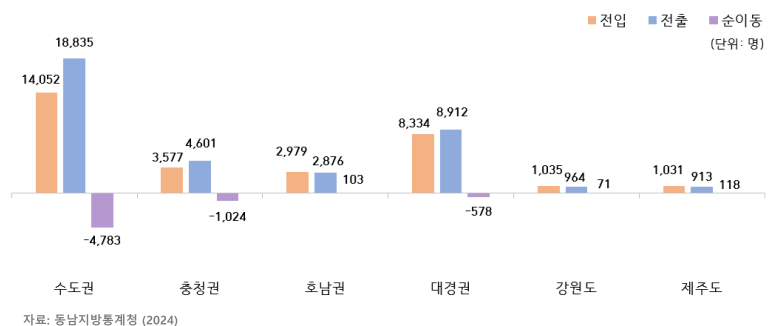
## 2. 지역간 인구 불균형

인구영향평가제도 운영을 통한 부산지역 인구위기 대응

### 지역별 순이동률



### 부울경에서 타권역으로 이동



자료: 동남지방통계청 (2024)

- 부울경 지역의 경우 인구의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반면, 수도권의 경우 2017년 이후 인구의 순유입으로 전환
- 부울경 지역의 순이동인구 중 수도권 유출 인구는 약 4,783명으로, 전체 순이동인구의 78.5%를 차지(2024년 3분기 기준)

- 8 -

## 2. 지역간 인구 불균형

### 부울경 및 수도권 추계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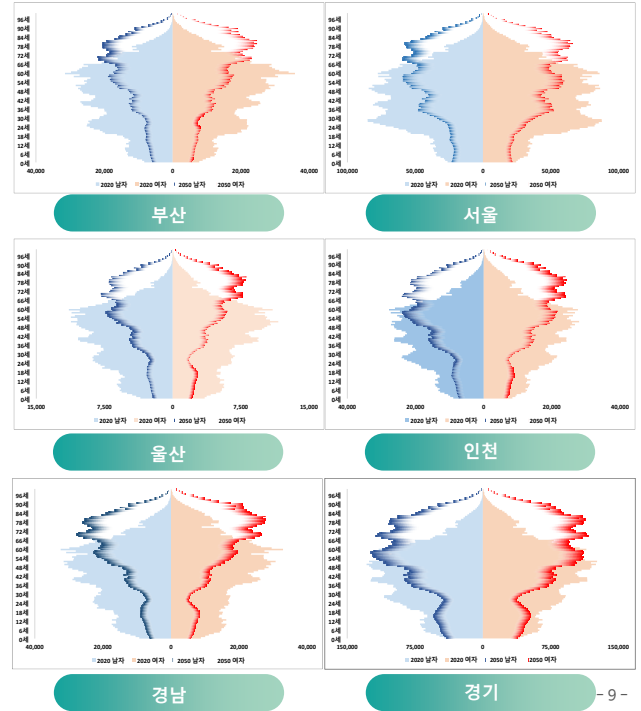
(단위: 명, %, 100명당 명)

구분	인구		2020-2050 인구 증감율	노년부양비	
	2020년	2050년		2020년	2050년
전국	51,836,239	47,358,532	-9.45	21.8	78.6
부울경	7,834,912	6,125,850	-27.90	23.8	93.7
부산광역시	3,355,632	2,512,270	-33.57	26.5	90.2
울산광역시	1,139,069	844,246	-34.92	16.3	84.8
경상남도	3,340,211	2,769,334	-20.61	23.6	99.9
수도권	26,021,282	25,085,789	-3.73	18.7	68.4
서울특별시	9,617,795	7,918,861	-21.45	20.6	67.7
인천광역시	2,951,065	2,813,782	-4.88	18.2	75.3
경기도	13,452,422	14,353,146	6.28	17.3	67.6

자료: 통계청(2022)

- 전국적인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부울경 지역의 인구 감소는 수도권에 비해 더욱 급격하게 진행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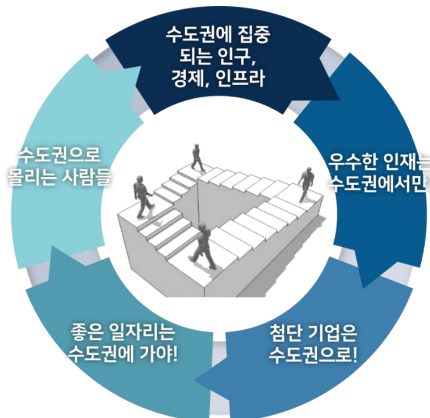
### 부울경 및 수도권 인구피라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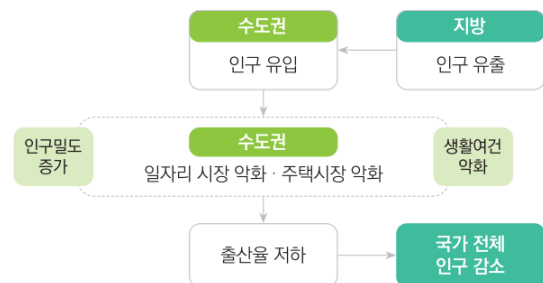
## 2. 지역간 인구 불균형

인구영향평가제도 운영을 통한 부산지역 인구위기 대응

### 수도권으로의 집중



### 수도권 인구 집중의 결과



자료: 김현호(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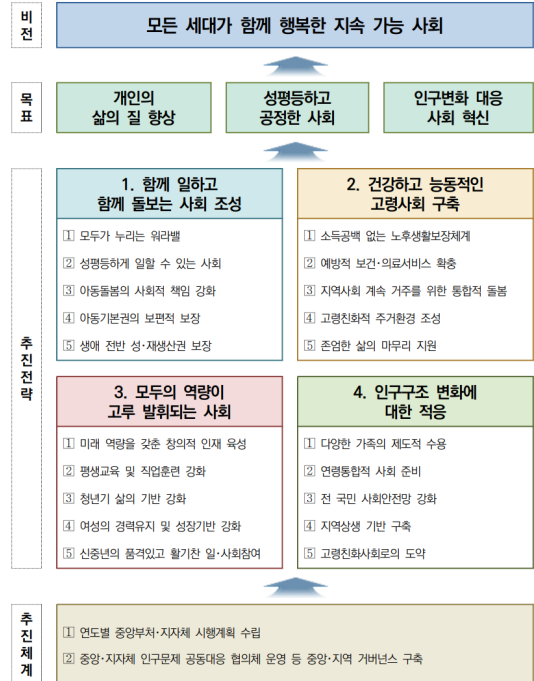
- 지자체의 독자적 노력만으로는 인구감소위기 대응은 불가능하며, 지역의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

### 3. 주요 인구정책

#### 중앙정부 정책

- 중앙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저출산 현상 완화, 고령사회로의 인구구조 변화 적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개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성평등 사회 형성을 통해 저출산 현상을 완화
  - 고령화되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년정책 추진 및 사회안전망 강화에 초점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인구정책 관련 표준 조례안을 제시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역분과를 설치하여 지역의 의견을 중앙 인구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
  - 다만, 지역 간 인구가동으로 발생하는 지역인구감소에 대한 고려가 부재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11 -

### 3. 주요 인구정책

인구영향평가제도 운영을 통한 부산지역 인구위기 대응

#### 부산시 인구정책 기본계획('21~'25)

- 부산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의 방향성
  -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시 차원의 인구종합대책 제시
  - 인구정책 추진체계와 추진과제를 점검하고, 융복합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통한 정책 간 시너지 효과 모색
  - 기존의 인구정책을 보강·보완하거나 새롭게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추가로 제시하여 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

#### 부산시 인구변화대응 TF

- 부산시는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완화'와 '대응'을 키워드로 전략과제를 추진
  - 출산율과 인구감소의 속도를 **완화**
    - ✓ 정부 저출생 대책 대응 및 실효성 제고
    - ✓ 돌봄·교육의 책임성 강화
    - ✓ 세대·연령 맞춤형 **주택 공급**
    - ✓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 인구위기로 인한 파급문제에 적극 **대응**
    - ✓ 청년이 **머무는 도시**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 ✓ 액티브 시니어를 통한 초고령 사회 대응
    - ✓ 포용사회,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추진
    - ✓ **일자리**와 인구의 선순환 기반 마련
    - ✓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지원 강화
    - ✓ **생활인구** 기반의 정책 전환 지원

- 12 -



## Ⅱ | 인구영향평가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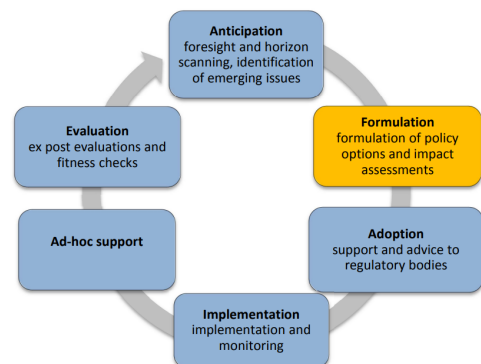
### 1. 영향평가제도의 특징

인구영향평가제도 운영을 통한 부산지역 인구위기 대응

#### 정책영향평가

- 정책 수립단계에서 수행되는 사전 분석(Acs et. Al., 2019)
  - 정책결정지원을 위해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행위
  - 현실에 대한 분석 및 미래에 대한 예측을 통해 인식된 잠재적 위협이나 기회에 대하여 정책행위가 필요한지를 평가
  - 전문가 및 시민, 정책 이해관계자가 직접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체계를 구성
  - 정책의사결정자는 정책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의 시행 여부를 결정
- 정책영향평가의 사례
  - 환경영향평가, 사회영향평가, 경제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등
  - 인구영향평가제도는 사회영향평가(Social Impact Assessment)의 한 유형
    - ✓ 사회영향평가: 어떠한 개발 사업이나 정책의 추진결과로 지역의 주민이나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것. 사람들의 생활양식이나 노동, 여가, 조직,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포함

#### 정책사이클에서 정책영향평가



자료: Acs et. al.(2019)

## 1. 영향평가제도의 특징

인구영향평가제도 운영을 통한 부산지역 인구위기 대응

### 주요 영향평가 제도

- 환경영향평가
  - 정책이나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평가하여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함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
  - 현재 「환경영향평가법」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회경제환경분야 영역에서 인구관련 내용을 평가하고 있음
- 건강영향평가
  - 정책이나 개발 사업이 특정한 인구집단의 건강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과 인구집단 내에서의 **효과** 분포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절차 및 방법, 도구를 조합한 것
- 고용영향평가
  - 법·제도 등이 수립·추진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고용효과**를 분석하여, 해당 정책이 의도한 본래의 **고유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제언**을 제시
- 성별영향평가
  - 성 주류화 전략 도구의 하나로 **공공정책을 성인지 관점으로 통합**하여 개별 사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 원인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성차별적인 구조를 전환**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15 -

## 2. 인구영향평가제도

인구영향평가제도 운영을 통한 부산지역 인구위기 대응

### 환경영향평가에서의 인구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분야별 세부평가 항목으로 사회환경 및 경제 환경 분야를 포괄
  -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초기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나, 현재에는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중 하나의 영역으로 축소 운영
  - 지역의 인구, 인구 구성, 인구의 증감 현황, 주택 보급현황과 함께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예측
  - 개발사업 진행 과정 및 완료 후 나타날 수 있는 인구변동사항들을 점검하고, 부정적인 영향이 예측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저감 방안 제시

###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의 인구영향평가

-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인구집중으로 인한 사회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총 허용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업의 경우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
- 제25조의2(인구집중 문제 방지 방안)
  1.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을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분석할 것
    - 가.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입지하는 주요 시설 및 부수적 시설로 인한 거주인구, 취업인구 등 인구의 증감
    - 나.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도권 내 인구의 이동 및 수도권과 수도권이 아닌 지역 간의 인구의 이동
  2. 제1호에 따라 분석된 인구유발효과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인구집중 저감방안을 수립할 것

- 16 -

## 2. 인구영향평가제도

인구영향평가제도 운영을 통한 부산지역 인구위기 대응

### 광역 지자체 인구영향평가

- 경기도
  - 인구영향평가 도입을 위해 2018년 인구영향평가 설계방안 연구용역 수행
  - 2020년 이후 경기도 자체적으로 인구영향평가를 실시
  - 2023년 경기연구원 내 인구영향평가센터를 설립하여 위탁 운영
  - 인구인지 예산제도를 도입 (예산 설계 및 심의 과정에서 정책 타당성을 판단)
- 서울시
  - 제도 도입을 위해 2022년 서울시 인구영향평가 도입 및 제도화 방안 연구, 2023년 서울시 인구영향평가 시범적용 용역을 진행
- 전라남도
  - 제도 도입을 위해 2017년 전남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 2024년 전라남도 인구영향평가 시범적용 연구를 진행

지역	사업명	시행 여부	시행주체	인구영향평가 조례제정 여부
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	시행중	부산연구원	○
서울특별시	인구영향평가	준비중	서울연구원	○
인천광역시	인구영향평가	준비중	인천연구원	X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시행중	경기연구원	○
경상남도	인구정책영향평가	개선중	경상남도	△
전라북도	인구영향평가	준비중	전북연구원	X
전라남도	인구영향평가	시범 도입	서울대 인구정책 연구센터	△

자료: 지자체 홈페이지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검색일: 2024.08.19.)

- 17 -

## 3. 부산시 인구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제도 운영을 통한 부산지역 인구위기 대응

###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영향평가

- 지역 인구위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증대
  - 수도권외 지역의 경우 인구의 자연적 감소와 더불어 사회적 감소가 동시에 진행
  -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구구조 불균형이 가속
  -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가 주요 현안으로 등장
- 부산시는 인구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인구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도모하고, 인구정책 개선 및 확대를 위한 실행력을 부여
  - 「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시 인구정책에 대한 인구영향평가를 실시
    - ✓ 제2조(정의) 1. "인구영향평가"란 부산광역시에서 정책·계획·사업 등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지역의 인구구조와 부산광역시민의 일상적 삶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그 영향을 예측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 ✓ 제6조(인구영향평가 대상) ① 시장은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른 **인구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단계에서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 제9조(평가방법) ① 인구정책을 시행하는 부서의 장은 인구정책의 **계획 및 실시** 전에 **인구영향평가자가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인구정책 총괄부서의 장은 자가진단서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인구정책 총괄부서의 장은 자가진단서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개선이 필요한 인구정책에 대하여 인구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인구정책 총괄부서의 장은 자가진단서에 대한 검토와 인구영향평가보고서의 작성을 전문가 또는 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 ⑤ 인구정책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서를 인구정책 소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 1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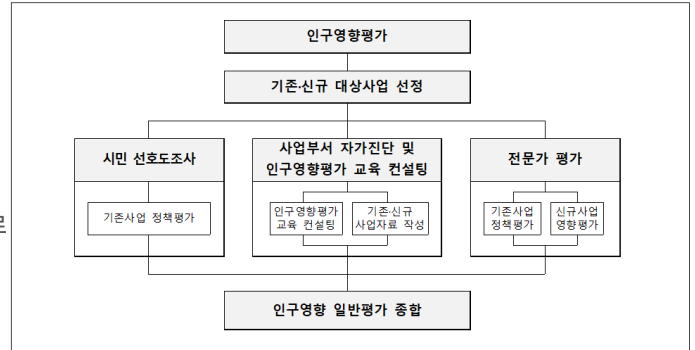
### 3. 부산시 인구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제도 운영을 통한 부산지역 인구위기 대응

#### 부산시 인구영향평가 개요

- 목적
  -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사업에 대한 종합적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정책 사업들 대상 체계적 평가 및 사전·사후 모니터링 강화
  - 부산광역시 지역 인구감소 문제 적극 대응을 위한 종합·장기적 인구정책 계획 수립 및 추진 방안 마련
- 인구영향평가 방법
  - 기존사업: 인구정책 시행계획의 6대 정책분야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2년경과 전액시비 및 공모사업 전체를 부산시 협의를 통해 선정
  - 신규사업: 예산편성 신규사업 중 전액시비 및 공모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인구감소대응 및 인구구조 개선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전문가 자문단 검토 및 부산시와의 협의를 통해 선정
- 인구영향평가 실시 현황
  - '20 자체시범시행(10개 사업) → '21 평가대상 확대(19개 사업) → '22 인구영향평가(40개 사업) → '23 인구영향평가(48개) → '24 인구영향평가(41개(기존사업 34 + 신규사업 7) 사업)

#### 부산시 인구영향평가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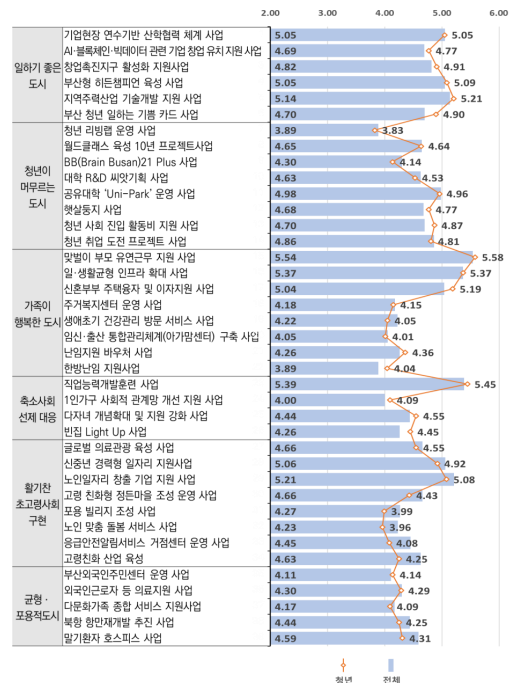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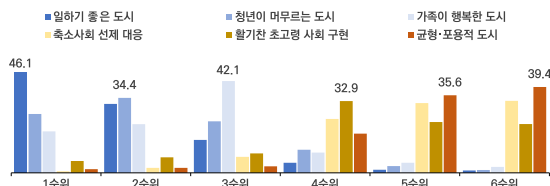
- 19 -

### 3. 부산시 인구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제도 운영을 통한 부산지역 인구위기 대응

#### 2023년 시민선호도조사(기존사업)

- 부산시민 700명(만 18세 이상) 대상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및 세부사업별 선호도 조사 시행
  - 6대분야 정책과제 선호도 순위 도출
  - 세부사업별 우선순위 결과 도출



- 20 -

3. 부산시 인구영향평가

2023년 신규사업 인구영향평가

연번	분야	주요사업	부서별 자가 전담 (인)	순위	전문가 평가 (인)	순위	총 계 (100)	종합 순위
1	산업 및 일자리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조성						
2		첨단산업(반도체) 인재양성 부트캠프사업						
3		부산청년문화패스 사업						
4		청결(청년이 끌리는) 기업 발굴·매칭 지원사업						
5	경주 환경 개선	희망더함주택 공공매입	41	2	37.0	2	78.0	2
6		전세피해 입차인 지원사업						
7	사회 약자 지원	저소득·비정규직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원	39	4	36.2	4	75.2	3
8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사업						
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권익지원사업	48	1	36.4	3	84.4	1

2023년 기존사업 인구영향평가

연번	분야	주요사업	시민 선호 도 조사 (20)	순위	부서 별 자가 전담 (40)	순위	전문 가 평가 (40)	순위	총 계 (100)	종합 순위
1		기업성장 연속지원·산업융합 체계 사물인터넷(IoT) 관련 기업								
2		창업·유치 지원								
3		창업촉진지구 활성화 지원								
4		부산형 하든센터인 육성	13.40	8	40.00	1	34.00	13	87.40	5
5		지역주력산업 기술개발 지원								
6		부산 청년 일하는 기업 키트	12.34	13	40.00	1	36.00	5	88.34	4
7		청년 리빙업 운영								
8		월드클래스 육상 10년 프로젝트 BRAIN Busan 21 Plus 사업								
9		대형 R&D 씨앗기획 사업								
10		공공대학 'Uni-Park' 운영								
11		청년 사회적 기업 지원								
12		청년 취업 지원 프로젝트								
13		맞벌이 부모 유연근로 지원								
14		일·생활양면 인프라 확대	14.55	3	40.00	1	34.33	11	88.88	2
15		신혼부부 주택임대 및 이차 지원	13.45	9	38.00	6	37.50	4	88.95	1
16		주거복지센터 운영								
17		생애초기 건강관리 방문 서비스								
18		임대·출산								
19		통합관리체계(017일센터) 구축								
20		단양지원 사무처 사업	10.88	29	40.00	1	37.67	2	88.55	3
21		한정·단양 지원사업								
22		직업능력개발훈련								
23		인간자본 사회적 관계망 개선 지원								
24		다자녀 개념확대 및 지원 강화								
25		빈집 Light Up								
26		글로벌 의료관광 육성								
27		신종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								
28		노년일자리 창출사업								
29		지원(근무환경개선)								
30		고령친화형 공동주택 조성 운영								
31		포용 일자리 조성								
32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33		중요인재발견사업·거점센터 운영								
34		고령친화 산업 육성								
35		부산외국인 주민센터 운영								
36		외국인·국외자 등 의료원 사업								
37		다문화가족 통합 서비스 지원								
38		북한 통일개발 추진								
39		일자리·문화·스포츠 사업								

3. 부산시 인구영향평가

정책대상·영역 구분, 정합성 지표 안

구분	항목	내용
정책 대상	성별	해당 사업이 어떠한 성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령	해당 사업은 어떠한 연령에 영향을 미치는가? 영유아(0~5세), '어린이'(6~12세), '청소년'(13~17세), '청년'(18~39세), '중장년'(40~64세), '노인'(65세 이상)으로 구성
정책 영역	인구 변동	해당 사업은 인구변동 관련 분야 중 어떠한 정책적 특성을 가지는가? '출생', '사망/건강', '인구유입', '정주', '해당없음'으로 구성
	가족	해당 사업은 가족과 관련하여 어떠한 정책적 특성을 가지는가? '가족형성(결혼/동거)', '출산/돌봄', '1인가구', '해당없 음'으로 구성

구분	항목	내용
부산 시 인구 정책	일자리	일자리/창업지원 해당 사업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창업확대와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는가?
		좋은 일자리 해당 사업이 지역기업의 고용의 질 개선에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는가?
		산학협력 해당 산업이 산학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는가?
	청소년/ 청년	지역인재양성 해당 사업이 지역혁신 인재 육성 및 유입과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는가?
		자립/활동지원 해당 사업이 청년의 자립과 성장, 활동 지원에 있어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는가?
		주거지원 해당 사업이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 및 내 집 마련과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는가?
	저출생	임신/출산지원 해당 사업이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과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는가?
		돌봄/교육지원 해당 사업이 부모 안심 교육·육아 환경 조성 및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는가?
		일·생활균형 해당 사업이 일·생활균형 인프라 조성 및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는가?
	축소 사회 대응	스마트/컴팩트 도시 조성 해당 사업이 부산형 15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컴팩트 도시조성과 직·간접적인 연관성 이 있는가?
		직업능력개발/평생교육 해당 사업이 산업현장의 인력공급 감소 대비와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는가?
		1인가구지원 해당 사업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출현 및 1인가구 증가 현상 대비와 관련하여 직·간 접적인 연관성이 있는가?
	초고령 사회 대응	유희공간 자원활용 해당 사업이 도시의 유희공간 자원 활용과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는가?
		일자리/경제 지원 지원 해당 사업이 고령자의 일자리 지원 및 경제지원 지원과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는가?
		주거지원 해당 사업이 고령자 맞춤형 주거지원과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는가?
	균형· 포용 도시	돌봄서비스 해당 사업이 고령자를 위한 사회적 돌봄 서비스 강화와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는가?
		고령친화산업육성 해당 사업이 고령자를 위한 친화 산업 육성과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는가?
		이주/다문화 해당 사업이 외국인 및 이주자, 다문화 부산 시민 지원과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는가?
		장애인/소수자 해당 사업이 부산지역의 장애인 및 소수자 지원과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는가?
		수도권 일극화 대응 해당 사업이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한 부산시 정책으로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는가?
		부산지역 내 균형발전 해당 사업이 부산 지역 내 균형발전과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는가?
		지역 공동체 구성 해당 사업이 부산 지역 공동체 지원과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는가?

### 3. 부산시 인구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제도 운영을 통한 부산지역 인구위기 대응

#### 인구정책평가 지표 안

구분	항목	내용
인구정책평가 (기존과제)	부산시 인구정책 기본·시행계획과의 정합성	해당 사업이 부산시 인구정책 기본·시행계획이 목표로 하는 비전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
	부산지역 인구실태(현안) 반영도	해당 사업을 계획·추진하는데 있어 부산지역 인구실태 및 현안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인구정책으로) 사업의 효과성	해당 사업은 지역의 인구위기극복을 위해 얼마나 효과적인가?
	사업대상(수혜자, 지원 대상/기관)의 적절성	해당 사업의 수혜자 및 지원 대상/기관은 적절한가?
	성과지표의 적절성	해당 사업의 인구정책 효과를 확인하기에 적절한 지표를 설정하였는가?
	계획이행 및 목표 달성도	해당 사업의 성과목표 및 목표실적이 제대로 이행되었는가?
	사업전달체계의 효율성	해당 사업의 효과가 정책수혜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는가?
인구영향평가 (신규과제)	부산시 인구정책 기본·시행계획과의 정합성	해당 사업이 부산시 인구정책 기본·시행계획이 목표로 하는 비전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
	부산지역 인구실태(현안) 반영도	해당 사업을 계획하는데 있어 부산지역 인구실태 및 현안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사업대상(수혜자, 지원 대상/기관)의 적절성	해당 사업의 수혜자 및 지원 대상/기관은 적절하게 설정되었는가?
	성과지표의 적절성	해당 사업의 인구정책 효과를 확인하기에 적절한 지표를 설정하였는가?
	사업전달체계의 효율성	해당 사업의 효과가 정책수혜자에게 효과적으로 구성되었는가?

- 23 -

### 3. 부산시 인구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제도 운영을 통한 부산지역 인구위기 대응

#### 정책종합평가 지표 안

구분	항목	내용
정책 실무자 종합평가 (기존 및 신규과제)	사업의 필요성	해당 사업은 부산시 인구현안 해결을 위해 얼마나 필요한 정책인가?
	사업 개선 및 확대 필요성	부산시 인구현안 해결을 위해 해당 사업이 개선/확대될 필요가 있는가?
	협업 및 협조 필요여부	해당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타 조직과의 협업 및 협조가 필요한가? '민간단체 및 공공기관', '부산시 내 다른 부서', '중앙정부', '기초지자체'와의 협업 고려
전문가 종합평가 (기존과제)	사업의 필요성	해당 사업은 부산시 인구현안 해결을 위해 얼마나 필요한 정책인가?
	사업 수행의 적절성	해당 사업은 부산시 인구정책으로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가?
	사업 개선 및 확대 필요성	부산시 인구현안 해결을 위해 해당 사업이 개선/확대될 필요가 있는가?
	협업 및 협조 필요여부	해당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타 조직과의 협업 및 협조가 필요한가? '민간단체 및 공공기관', '부산시 내 다른 부서', '중앙정부', '기초지자체'와의 협업 고려
전문가 종합평가 (신규과제)	인구정책으로의 영향력	해당 사업은 부산시 인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가?
	사업 개선 및 확대 필요성	부산시 인구현안 해결을 위해 해당 사업이 개선/확대될 필요가 있는가?
	협업 및 협조 필요여부	해당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타 조직과의 협업 및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민간단체 및 공공기관', '부산시 내 다른 부서', '중앙정부', '기초지자체'와의 협업 고려

- 24 -

# Ⅲ | 지역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광역 지자체 연구원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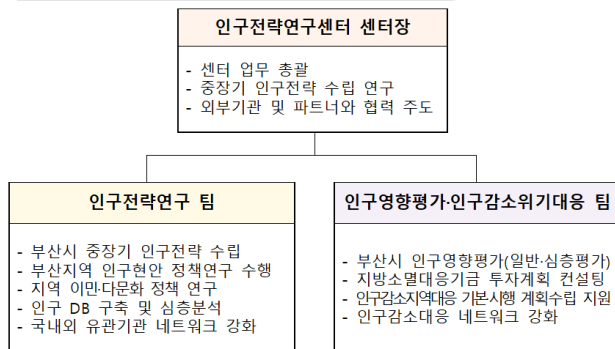
## 1. 부산시 인구전략연구센터

인구영향평가제도 운영을 통한 부산지역 인구위기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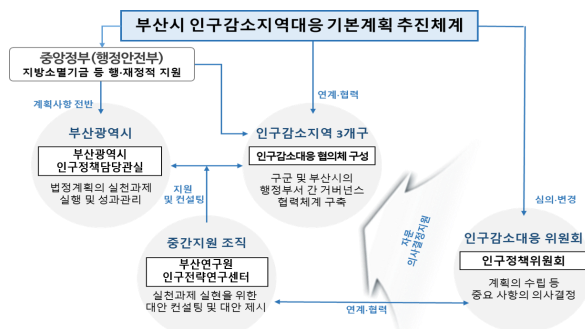
### 인구전략연구로의 전환

- 인구통계 중심의 단순 인구정책에서 벗어나, 인구와 사회 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하면서 인구변동의 영향을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인구전략(demographic strategy) 중심의 연구로 전환
-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사업에 대한 종합적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정책 사업들에 대한 체계적 평가 및 사전·사후 모니터링 강화
- 인구영향평가센터를 ‘부산광역시 인구전략연구센터’로 전환하여 지역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인구전략 연구를 수행

### 인구전략연구센터 조직 및 업무



### 부산시 인구감소위기대응 체계



## 1. 부산시 인구전략연구센터

인구영향평가제도 운영을 통한 부산지역 인구위기 대응

### 인구정책 심층평가 도입

- 현재의 인구영향평가는 모든 인구정책 사업에 대한 **일반평가**를 중심으로 진행
  - 부산시 인구변화대응 중장기 추진과제 중 **인구정책 재구축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심층평가를 진행할 계획
  - 선정된 분야의 **인구정책 효과성 분석**(전문가 평가), **인구정책 추진부서 의견 청취**, **유사 인구정책 사례 확인**
  - 심층평가 결과를 통해 현재 추진되는 인구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동시에 **신규 인구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 ✓ 영역별 인구정책 재구축: 부산시 인구정책의 효과성 강화를 위해 영역별 인구정책 기대효과 분석을 추진하는 동시에 신규 인구정책을 발굴하여 시행, 심층평가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영역 내 인구정책 사업에 조정 및 통합, 연계성 강화 등의 정책 조정을 추진

### 인구감소위기대응

- 부산광역시 지역 주도형 법정계획 수립체계 구축을 위한 「인구감소지역대응 시행계획」 수립을 지원
- 인구감소지역 인구정책 및 사업 발굴과 지방소멸기금대응 투자계획 수립에 따른 컨설팅 수행
  - 부산시 이외에 인구감소지역(동구, 서구, 영도구) 및 인구감소 관심지역(중구, 금정구)을 대상으로 지원 수행
  - 부산광역시 지역 주도형 법정계획 수립체계 구축을 위한 인구감소지역대응 시행계획 수립 지원
  - 효과기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종합 컨설팅 수행

- 27 -

## 2. 결론 및 제언

인구영향평가제도 운영을 통한 부산지역 인구위기 대응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구영향평가제도는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s)와 평가(evaluation)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음
  - 일반적인 영향평가제도는 정책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예상하여 해당 사업의 실행 여부를 결정
    - 인구정책의 경우 엄밀한 의미의 영향평가 필요성은 매우 낮음
  - 인구정책의 효과성을 정량적으로 계산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임
- 인구영향평가의 목적 및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 해야 함
  - 인구위기 극복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정책연구 수행 통해 지역의 인구현안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 설정(ex: 기본계획 수립)이 우선되어야 함
  - 인구 정책을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것을 중요 목표로 고려한다면 인구인지예산제도와 같은 다른 방안 역시 고려해야 함
- 인구영향평가 결과 활용을 위한 환류체계 구축이 중요
  - 인구영향평가 결과가 정책 사업 개선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강제력 있는 환류체계 구성이 필요함
    -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개발을 통해 발생 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정책의 추진이 제한됨
  - 심층평가 도입을 통해 인구정책 효율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추진하거나, 우수 인구정책사업 선정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지역 인구정책 홍보·포상 하는 등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

- 28 -